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물가 자극 '채권 자경단'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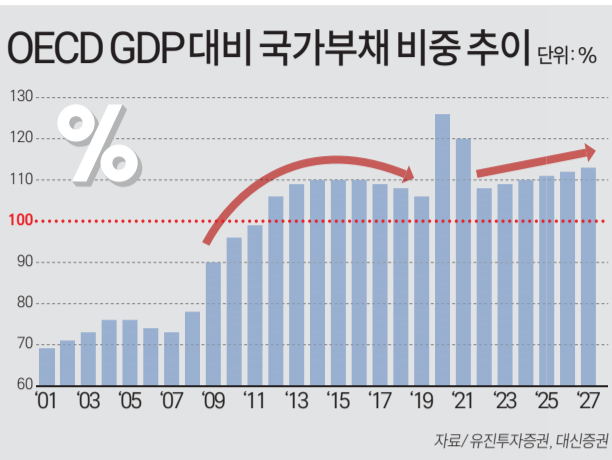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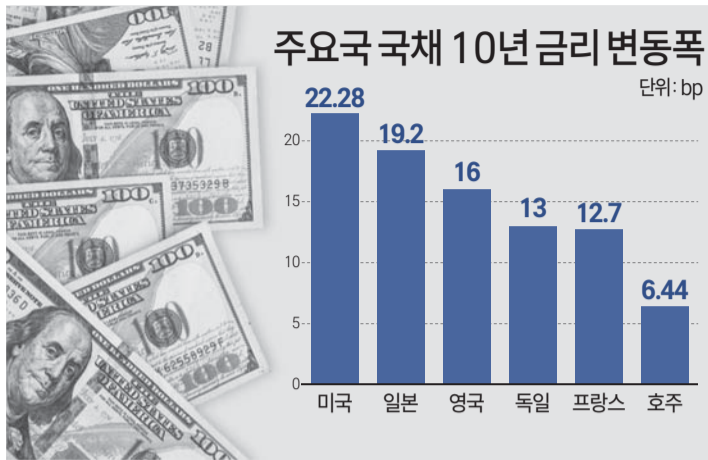
30년물 미국채 금리 '마의 5%'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국채 20년물 입찰 결과를 발표한 후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12%(15일)까지 치솟으며 월스트리트에서 우려하던 '마의 5%'를 넘어섰다. 국채 입찰은 미국 연방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꾸는 율에 행사다. 그런데 이날 국채 투자자들은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이라도 앞으로 돈을 빌리려거든 이자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 그 결과 금리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7%대로 올라섰다. 세계 1, 2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일본 국채에 대해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국채를 내던져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방만한 재정 정책을 질타하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무리 경제력 있는 나라라도 낮은 금리로 나랏빚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 글로벌 채권 시장의 반란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 4.5%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 보고 있는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이다. 30년물은 5%를 넘어섰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개월 전 4.042% 수준이었으나 점차 중동전쟁 영향을 반영해 왔다. 높아진 국제유가가 미국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4월 소비자물가지표(CPI)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로써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日 국채 10년물 2.7%대로 올라
“일본의 국채금리 0.1%p 오르면
美 등 주요국 0.02~0.03%p 상승”

英 30년물 28년만에 최고치 경신
韓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757%

“채권 자경단 돌아온 것 같아
국채, 시중유입 물가자극 악순환”

일본 30년물 금리는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고 있고,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2.7%를 넘어서는 등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우려하던 일본이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물가(CPI)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일본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AFH 웰스 매니저먼트는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본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빌려 일본 국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이는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를 0.02~0.03%포인트가량 밀어 올리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고 전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스페인·호주에서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도는 1.7%를 기록했지만,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금리를 올려 조여야 할 상황을 만들 수 있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처지다. 1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57%, 10년물 금리는 연 4.239%까지 뛰었다.

주기도 급락했다. 금리가 오르면 빛을 낸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다우평균(-1.07%), S&P500(-1.24%), 나스닥(-1.54%) 모두 크게 하락했다. 중동 전쟁이 다시 불안에 휩싸이면서 인공지능(AD)이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라 기대를 금리 불안이 압도했다.

이 같은 고금리 충격은 국내 증시에 곧바로 반영됐다.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며 전 거래일 대비 6.12% 급락한 7493.18로 거래를 마쳤다. 18일에도 코스피는 반등 마감했지만, 장중 7142.71까지 밀리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 채권 자경단, 그들이 왔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 올리고 글로벌 각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동안 24조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미국이 질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총부채가 56조달러, 추정 GDP의 120%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으로 편성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D2)은 2029년 100%를 돌파해 100.1%를 기

록할 전망이다. 1년 전 예상(98.9%)보다 높아졌고, 100%대에 도달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졌다. 아이엠에프는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채비율에 대해선 올해 54.4%, 2030년 61.7%, 2031년 63.1%로 전망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케이 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출연해 “채권 자경단이 돌아온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중심을 잃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채권 자경단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드러내는 시기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 국채 발행 물량 급증 등이다”면서 “여기에 더해 정부 부문의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다시 시중에 유입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 역시 금리 동향이나 채권 투자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채권 자경단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투자자인 에드 애데나가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낸 용어로, 국채 금리를 급등(채권 가치 하락)시켜 주로 각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흐느는 시도를 막는 시장의 움직임을 뜻한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도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출현으로 광범위한 미국채 구매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정책이 저지된 바 있다. 2022년에는 리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영국 국채 구매 현상이 나타났다. 트러스 총리는 영국 국채 매도세에 따른 금리 급등과 영국 파운드화 급락을 견디지 못한 채 정책 철회와 더불어 49일 만에 ‘최단기’ 낙마하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1면 ‘햇살론, 채무조정...’서 계속

“국민성장펀드 8.4조 공급... 韓 미래 성장의 기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원금액 절반 지방에 투입
첨단 유망기업 투자통로 확대”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8조 4000억원을 공급했고,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국민성장펀드 유관기관과 학계 및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성장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대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라며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억원(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지역금융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지역금융기관장들과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학기 수협은행 은행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임중석 iM금융 총괄. /뉴시스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며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도입취지 및 평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의 뿌리가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막대한 유동성 공

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하 연구위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선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라면서도 “다만 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큰 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중요하며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대한 평가, 제기논점 및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투자가 진행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AI 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등은 모두 첨단전략산업의 필수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자유도의 대중물 역할을 했다는 데서 지원 목적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라며 “조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 진행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자 산업은행 및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수협은행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하고,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취약차주 일수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채무조정 연계해야”

◆ “오히려 장기연체 유도”

금융권에선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취약차주의 장기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이 제외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신용점수 하락과 추심 부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 연체를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연체 위험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햇살론 상환부담이 남을 경우 재연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부채무만 조정될 경우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차주일수록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도 가장 부담이 큰 대출이 남아 있으면 제도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조정이 재기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서민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